

기업 옥죄 결과... 나라빛 ↑·1%대 성장률로 '부메랑'

집권 반환점 文정권 현주소

〈中〉 '소주성'에 역풍 맞은 韓경제

근로소득 16년래 최대 격차
비정규직 748만명 역대급
자영업자·서민에 직격타로
내년 적자 국채 60조원 달해
친기업정책으로 전환 목소리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배경은 전 정권 때 행해진 경제정책과 연관이 깊다. 당시 전 정권은 초이노믹스(기업 소득 환류세제 및 LTV·DTI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최경환호 경제정책)·친재벌 정책 등을 구사했다. 이에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 20%)의 명목 기준 월평균 소득'은 전 정권 출범 전인 2012년 774만6812원에서 지난 2016년 834만7922만원으로 60만1110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명목 기준 월평균 소득'은 144만6963원으로 같은 기간 9만4890원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우리사회에 퍼진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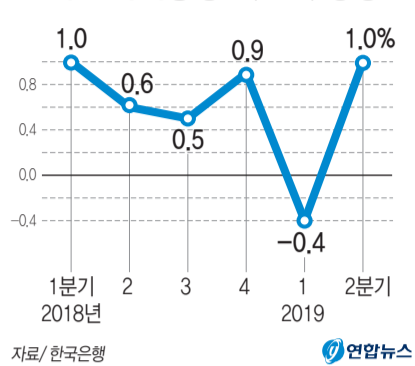
람중심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했다. 사람중심경제는 전 정권과 달리, '분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세계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혁신성장(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불공정 거래 개선)' 등 3개 축이 사람중심경제를 이루고 있다.

'사람중심경제'를 앞세운 현 정권은 그렇게 집권 반환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 정권 때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 하위 20%인 1분위가

구 근로소득(월 43만8700원)은 6분기 연속 감소했고, 5분위 배율은 5.3배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큰 소득격차를 보였다. 그뿐인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년래 최대인 748만명으로 전년 대비 87만명이 급증했다.

현 정권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한 자영업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골목상권 업종 경기전망'에 따르면, 영세상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매출과 순이익은 두자릿수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19개 주요업종 평균 매출 증감률은 올해 -13.7%, 내년 -15.8%로 나왔고 평균 순이익 증감률은 올해 -17.0%, 내년 -17.2%로 예상했 순이익은 매출에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빼고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갖는 순이익을 뜻한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전 정권 때와 다르지 않자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주목했다. 실제 현 정권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렸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등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혈세로 매워야 하는 공무원 수 역시 17만명을 증가시켜 국민들로부터 세수 확대라는 불감증을 낳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 “내년(예산안)에 나라빛(적자 국채)을 60조원을 발행해 깜짝 놀랐다”며 “베네수엘라도 대책 없이 세금을 거둬 무상 시리드를 했다. 정부가 '소주성'을 계속 고집했지만 하위 계층이 더 어려워졌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률도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IMF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

했던 2.6%에서 2.0%로 0.6%p나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를 지목했다. 여기서 IMF가 세계경제의 전망치를 3.3%에서 3.0%로 0.3%p, 선진국 경제를 1.8%에서 1.7%로 0.1%p 내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하락폭은 큰 편이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마저 쪼그라드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지금이라도 친기업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 때 “(현 정권이) 친노동·반시장정책에 문헌 경제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진단 중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30·50국가(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성장률이 둘째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IR(투자설명회)에서는 “이른바 3050(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한국이 '아웃스탠딩'(탁월하고 두드러진)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LG전자, 특허소송 中으로 전선 확대

하이센스, 협상요청에도 모르쇠
중국 TV기업 저가 공세에 '제동'

LG전자가 중국으로 특허 전쟁 전선을 확대한다. 무려 12년만이다.

LG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중국 가전기업 하이센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서 판매 중인 하이센스 TV 제품이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무선전 기반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등 LG전자가 보유한 편의성 관련 기술 4건을 하이센스가 침해한 것으로 의심했다.

LG전자는 올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특허 침해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전선'은 더 커지게 됐다. LG전자는 최근 QLED 표시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8K 해상도 표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냉장고 제빙기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현지 업체들과 소송을 시작했다. LG그룹으로 보면 LG



LG전자의 8K 올레드 TV.

/LG전자

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과도 특허 침해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소송 대상이 중국 업체라는 데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중국 업체는 현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탓에 소송전을 치르기 까다롭기로 잘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LG전자도 2007년 TCL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후 12년여만에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소송이 TV 시장에서 LG전자의 절대강함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업체가 LCD TV 저가 공세를 이어가면서 중저가 시장을 거의 독식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중국 업체 전략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재용 기자 juk@

“AI·ICT 융합엔 韓, 글로벌 경쟁력 확보”

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박상규 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우리나라가 초지능·초성능·초실감·초연결과 연결되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을 개발한다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은 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 참석해 '변화와 혁신으로 탈바꿈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AI를 잘 쓰는 나라', 국가지능화를 목표로 AI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19회를 맞는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ICT 관련 9개 전문가가 공동으로 주관해 6일까지 진행된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등 ICT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지만 AI 역량에서는 미국·중국에 뒤지고 있다”며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AI+하드웨어'나 'AI+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AI와 ICT 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로 신사업 창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AI 지능형 반도체 칩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AI+ICT 융합으로 홀로그램 게임, 스마트 워치, 로봇 판사,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흡, 가상현실(VR)을 활용한 AI 지원 진단 등 더 실감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AI 통합 교통시스템이 등장하고, AI로 미세먼지를 예측하고, 인력문제가 제기되는 국방 분야에서 AI가 지원하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AI 사회복지사도 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 이르면 AI가 고도화됐고 2020년에는 물체나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인간 감성을 처리하는 수준까지 진화되고, 2030년 이후에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AI, 슈퍼 AI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특히 이미지 등에서 객체를 추출하는 능력이 AI가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객체 추출 능력이 92~95 수준인데 AI가 96까지 측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로 미국 내 일자리가 50% 정도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일자리 감소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윤정 기자 echo@